

토론문

**충남지역 사회적경제 조직간 거래
활성화를 위한 몇가지 제언**

박 상 우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사무처장

충남지역 사회적경제 조직 간 거래 활성화를 위한 몇가지 제언

박상우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사무처장)

○ 세계화된 시장경제 속에서 자본주의 축적체제의 위기과정에서 대두된 사회적 경제는 실업과 복지 후퇴에 대한 시민사회의 새로운 집합적 대응전략이었음. 이처럼 새로운 대안으로서 대두된 사회적경제는 1)지역사회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하는 주요한 방안으로 고려되고 있으며, 2)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커뮤니티비즈니스, 마을만들기 등의 영역에서, 3)지역민의 삶을 중심으로 새로운 지역 경제 주체를 형성하고 있으며, 4)시민사회의 다양한 혁신적인 구상과 실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고 있음.

○ 그러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일천한 경험과 단절적 이해로 인해 여전히 1)취약 계층 일자리 창출사업이나, 2)대기업과 봉사단체에서 해오던 사회공헌활동 정도로 이해되고 있거나, 3)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의존한 또다른 생존 경쟁, 그리고 4)정부의 눈먼 돈 개념이 확산되어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기도 함. 이처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도 자활과 같이... 제도화되면서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와 지적도 없지 않음.

○ 특히 주목할 것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지역사회로부터 그 활동을 의미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거나, 신자유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위기를 해결코자 만든 그 실천방식이 오히려 유사한 사업내용의 중복(구멍가게간 품목 경쟁 등)과 실적(노동의 질적 향상보다는 수익 중심 등) 중심의 또 다른 경쟁의 양상으로 비춰지면서 신자유주의를 추종하는 역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임.

즉 경쟁에서 이기려는 욕망과 공포가 병존하는 시장에서 국민의 생활불안 요소들(보육과 교육, 일자리, 주거, 노후, 건강불안 등)을 넘어서기 위해 시작된 사회적경제 조직들도, 지금까지 사회에서 강요당해온 성공하기 위한 경쟁과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넘어서고 있지 못하다는 것임.

(1등 제일주의, 사교육비 연간 20조, 가계부채 잔액 915조, 주택담보대출 잔액 316조, 2가구중 1가구 집세마련 대출, 국민의 57%가 빚 갚기 어렵다. 2012년도 1회 이상 연체자 18%, 세계 자살율 1위, 80세 이상 10만명당 214명 자살, 대책없는 노후, 성형 인구 세계 1위, 성형시장 규모 5조, 최장 근로시간 세계 1위, 비정규직 근로자 600만명, 100만원 이하 급여자 456만명 -전체 근로자의 32% -3명당 1명꼴, 자영업자 350만명 - 대출 354조, 30%가 저소득 생계형 자영업자/220만원, 1개 창업시 4개 휴업 내지 폐업, 빈곤층 432만명 급증 - 1990년대 218만명, 세계1위 저출산 및 해외입양 지속연수, 고령화 속도 세계 1위, 자녀 1인당 양육비 2억6천2백만 + 자녀 1인당 교육비 9천6백만, 청년실업 100만 시대, OECD국가중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3년 연속 꼴찌 등)

○ 결국 사회적경제 조직간 내부거래 활성화에 앞서 전제되어야 할 조건은, 개별기업의 생존 패러다임에서 사회문제 해결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지역화 및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대한 논의와 실천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바꿔말하면 소셜미션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존재이유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으며, 소셜미션은 지역의 경제와 문화 등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므로 지역화(로컬라이징) 이슈는 사회적경제 조직이라면 당연한 미션이자 사명임.

○ 고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개별기업들은 연대와 협력을 통한 생존 전략을 구상해야 할 것임. 소셜미션을 기초로 한다면, 소셜미션 자체에 대한 고민을 넘어 어떻게 이 미션을 목표로 하는 지역형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임팩트를 극대화하고 지속가능성 확보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내부거래 활성화,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등 지역화 블록 형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망을 구축해나가는 것이 수순이라 사료됨.
(스스로 사회적기업의 자립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대한 관점 필요 - 3~5년만에 자립? - 일반기업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충남사회적경제연대회의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 지역간 연대
-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 농협 혁신운동 등 공동사업 전개

시군별
네트워크

업종별
네트워크

유통/판로
임팩트 극대화
지속가능성

충남협동조합네트워크

충남사회적기업협의회

충남마을기업협의회

충남지역자활센터협회

충남마을가꾸기협의회

교육/홍보

상담/컨설팅

심사지원
모니터링

모델발굴

자원연계
지역연대

시군별
네트워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희망마을

시민사회

주체 형성(사람발굴, 외부전문가)

마을

마을

마을

마을

마을

사람발굴
역량강화

코디네이터
인큐베이팅

자원조사
연구조사

SE_CB 통합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지원센터

마을가꾸기지원센터

○ 연구발표에서 제시한 것처럼 지난해 업종별 네트워크 구축 및 개별기업간 상호 협력사업을 통해 내부거래가 시도되었음. 지적인 대로 거래규모도 미미하고 거래수준도 초보적인 수준이고, 일방적인 거래가 대부분이지만, 이것이 개별기업 스스로의 필요에 의한 거래가 연대와 협력에서 이루어졌다는 관점에서 보면 그 자체에 큰 의미가 있음. 미흡하나마 지난해 연대와 협력의 경험과 축적이 앞으로 재원을 연계하거나, 브랜드 연계, 기술 및 자원봉사 연계, 인프라 연계 등도 가능케 만들어 나갈 것으로 여겨짐.

○ 따라서 초보적인 내부거래 수준에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이라는 관점에서 집단화, 공동화, 협업화가 가능한 공동사업(권소사업을 넘어서는), 상거래, 라이세싱, 공동연계 홍보, 공동연계 사업개발비 활용 등의 시도가 필요함. 시설과 장비,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사회적기업이나 특히 비영리조직 등은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시설과 마케팅, 기술, 유통, 구매, 온라인, 고객, 지역네트워크 등 다양한 경영분야의 인프라를 갖춘 사회적기업 또는 지역기업과 연계하거나 대기업의 CSR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것이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 또는 시군별 네트워크의 몫과 역할(플랫폼)일 것이며, 네트워크의 네트워크가 가능토록 교량자 역할을 할 시군 코디네이터의 선별 육성과 광역단위 중간지원 역량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임.

○ 유사업종간 네트워크에서 동종업종간 네트워크로 조직 편제가 필요함. 동종업종간 협력체계(피어컨설팅 등) 강화를 통해 영세성을 넘어서는 경험과 성과를 가지고 이종업종간 네트워크 및 다자간 거래로 확대해나가는 것이 필요함. (개별기업의 무리한 투자 및 영업 확장은 자본과 토대가 부족한 상태에서 반드시 경영악화를 초래하게 됨. 문어발식 대기업 보다는 소규모의 풀뿌리기업과 세포분열식 운영을 통해 연대와 협력체계를 구성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기타 사회적경제 조직간 거래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생각들

1) 협력지향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과 경쟁지향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시장경제의 내부거래를 구별토록 만들어갈 것인가?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2) 협력지향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임을 시장의 생산자, 소비자, 투자자, 지역사회 지지그룹, 기업내부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이해시키고 알려나갈 것인가?

- 내부 조직민주주의, 의사결정의 합리성, 경영정보의 투명성, 지배구조의 개방성 등을 확보하고 있는가?

- 공정무역제품,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제품에 대한 윤리상품 상표화가 가능한가?

- 초중고 사회적경제 교육교재 개발, 대학 전공과정 설치 등 사회적경제 가치 확산은 가능한가?

3) 법적 제도의 보완 및 철학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함께 만들어나갈 것인가?

- 현행 공정거래법과 증돌, 공공조달의 최저가낙찰제도 개선
- 공공조달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에 대한 표준위탁 지침 개발

4) 충남지역 사회적경제 관련조직간 어떻게 총역량을 결집해나갈 것인가?

- 사회적기업 만으로의 시장은 어렵다(?).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로컬푸드, 농어촌마을만들기, 장애인보호작업장, 노인생산공동체, 대안금융, 소비자생협, 의료생협, 신협, 시민사회단체 등
- 시군별 민간 자조역량 강화를 위한 확장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주체의 발굴(중간지원조직에 대한 통념적 개념 탈피, 역량 강화)
- 지역과 지역간, 광역간 연대 방안
- 민간주도의 사회자본 형성 방안 : 사회적경제 기금, 공동금고 설치 등